

“심인은 곧 부처 늘 수행에 힘쓰라”

진각종 성초 총인, 추기강공 범어

2015년 추기 스승강공을 앞두고 진각종 성초 총인이 10월 12일 법어를 발표하고 수행장진을 강조했다.

성초 총인은 법어를 통해 “심인은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자성이며, 심공은 자성을 깨달아서 의뢰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는 공부”라면서 “마음의 미묘한 공능을 믿고, 마음의 본래 자성은 심인이고 심인은 곧 부처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주의 법신불과 자성의 법신이 하나인 사실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각행자는 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행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진각종은 10월 20일 서울 총인원에서 ‘개명정진’을 주제로 진기 69(2015)년도 추기 스승강공을 봉행했으며,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 설법전서 전법공관경정불사와 전법연화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印師) 14명·범사(梵師) 3명 등 17명 행계가 참석했다.

이외에도 10월 16일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는 진각성종 회당대종사 열반 52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하고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주익 기자

법보종찰 해인사 인군 대형 축사 건립이라니

가야산환경위 15일 성명 발표

최근 합천 해인사 인군에서 대규모 축사가 건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야산환경수호위원회는 10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전커녕 해인사 인군에 대형 축사 건립을 허가한 합천군은 당사 사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수호위원회에 따르면 가야면 활산리 축사는 2011년 합천군으로부터 건립 허가를 받았다. 1498평 규모로 계획됐으며 최근까지 사업이 연기되었으나 올 하반기 공사를 착수해 50% 정도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대형축사 인군에 가야산 국립공원과 대장경테마파크, 청량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수호위원회는 “축사의 오·폐수, 분뇨 악취, 해충 등이 유입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야 할 관광지로서의 훼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 인군인 탓에 축사 건립 이후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축사 건립 허가를 취소할 것과 허가 업무를 담당할 합천군 관계자를 문책하고 합천군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신성민 기자

“교구책임제, 공감대 형성부터”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교구활성화 방안 세미나

교구책임제 도입 위해서는

중단적 여건 조성 우선돼야

교구 공의 체제 확립 필요

조계종 소속 교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범어)는 10월 22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람직한 교구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 시행을 위한 과제로 △교구법 제정 △교구대중 공의에 의한 운영체제 확립 △교구책임복지제도 시행 △교구 재정 및 인사권 부여 △교구 중무행정역량 강화 △교구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연수 △교구 관할 구역 획정 및 제도화 △직할교구 분구 및 교구 모델화 △교구의 의사 반영구조 강화 등을 꼽았다.

교구법 제정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의 방향, 구성, 내용, 운영, 권한 등을 명시한 ‘교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구 차원에서 규칙 등을 제정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구책임제에서 가장 우려할 점으로 ‘제왕적 교구본사주의’를 꼽은 박 사무국장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0월 22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구 대중의 공의에 의한 운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교구 공의 체제 확립을 위해 교구 총회와 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박 사무국장은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사무국장은 “교구총회가 일방적 총책 전달 공간이 아닌 사찰 등의 의사 소통의 장이자 총책 결정의 자리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사의 재정을 교구로 통합해 운영하는 ‘교구공영제’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사안 중 하나가 교구 재정 확충”이라며 “교구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제도를 활용해 교구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처분, 임대, 신축, 관람료 사용 등 재정 관련 권한을 교구로 이관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로의 전환은 종도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교구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 중단 집행부는 중앙집권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가진 종도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단 의사결정권자인 총무원장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교구활성화를 위한 본사의 기능과 역할’을,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이 ‘가톨릭 교구의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명본 스님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무기관 예산 250억원 편성

본사주지회의서 내년 예산 보고... 중점 과제에 초점

‘성역화불사모연의 밤’ 등 안내

“승가 모욕 단호히 대처” 결의

조계종 중앙중무기관의 내년도 예산 250억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중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33대, 34대 집행부를 통해 꾸준히 일구는 불교중흥의 씨앗이 지방행정시대를 맞아 각 교구에서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단의 미래, 불교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주춧돌로 버팀목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 기획실이 보고한 불기 2560(2016)년도 중앙중무기관 예산안은 250억 236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중단 목적 사업 추진과 중점 과제에 대한 예산 확보에 따라 이뤄졌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중앙분담금의 경우 2015년 배정액과 비교했을 때 약 6억 9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중앙총회에서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 의한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본사 주지 스님들은 중단 목

적사업과 중점 총책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분담금 증액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분담금 책정과 교구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단 대·내외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현안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서 열리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 행사에 교구본사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국대 및 용주사 문제와 관련한 일부 단체들의 의혹 제기로 중단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만큼 중단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예산 관련 기사 차주상보)

“사회 난제 해결 극복에 힘쓸 것”

여래종, 18일 창종 50주년 기념 법회

진신사리 황금목탑 제막도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은 10월 18일 충북 옥천 대약사서 중단 창종 50주년 기념 및 부처님 진신사리 황금 목탑 제막 법회를 중정 인왕 스님, 총무원장 명안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중정 인왕 스님은 “여래의 방에 들어간 마음, 여래의 옷을 입은 마음, 여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법화정법을 설하고 행해야 한다”며 “세 가지 마음이 갖춰져야 교화할 수 있으며 효과가 크다”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명안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 등 오늘날 우리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앞으로 맞이할 여래종의 미래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일이 바로 창종 50주년을 맞이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창종 50주년을 맞은 여래종은 남한산성 약사사를 중심 사찰로 현종정인 인왕스님의 원력으로 소의된 이후 60여년째 울리는 만발공양을 1983년부터 현재까지 주 6회 1일 300여그릇의 공양을 올리며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김주익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재)한국불교여래종은 10월 18일 충북 옥천 대약사서 중단 창종 50주년 기념 및 부처님 진신사리 황금 목탑 제막 법회를 개최했다.

고소·비방... 혼란 속의 조계종

스님 신상 의혹 제기에도 서로 고소 ‘법적 공방’

상호 간 비판 성명 연이어

스님의 개인 신상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단체와 스님 간의 쌍방 고소와 비판 성명으로 불교계가 멍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용주사. 용주사는 지난 10월 16일 주지 성월 스님 명의로 비상대책위 추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사무총장, 대변인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대활동을 한 우희종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와 홍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도 고소했다.

용주사 주지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4일 조계사 일주문 건너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입구에서 ‘5차 수호법회’를 가지는 등 꾸준히 현 주지 성월 스님의 비위 사실을 비판하는 집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연대 단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9일 중앙총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총무원은 입장문을 통해 “중단 회법부를 통한 진상조사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중앙총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총회를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총무원은 결과에 따라 중헌중법에 입각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주사 주지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중앙총회로 넘긴다는 것은 단지 시간 끌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종단 제2정화추진위원회’가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을 겨냥해 ‘중단 퇴출대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집행부 스님들은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0월 14일 제2정화추진위원회라고 주장하는 스님들이 창립기자회견을 열어 일면 스님을 퇴출대상이라는 망발을 퍼부었다”면서 “일면 스님의 사찰 평화 절도 은닉에 대해 공공연히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명확한 사찰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중단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에 대한 중단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최근 중단은 동국대학교와 제2교구본사 용주사 등 중단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사자의 단호한 해명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비방과 음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해종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제기의 정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종도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변질되고 있어 중단과 승가공동체 전체의 존엄과 권능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교계언론은 사실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부의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하듯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중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많은 종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과 부풀리기,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 급기야 종권 퇴진이라는 해종행위로 변질된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하고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정법의 당간지주에 파사현정의 깃발을 세우고, 중단과 승가공동체의 존엄을 훼손하는 해종행위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중단 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특히, 호법부는 중단의 화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방으로 중단의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중단 호법부를 향한 대중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헌중법에 입각한 진상조사와 결연한 의법조치로 자정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중앙총회는 총무원으로부터 제2교구본사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총회는 문중이나 이해관계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중헌중법에 입각한 진상조사와 결과에 따른 결연한 의법조치를 통해 종도들의 잠재된 불신과 의혹이 한 점 의혹 없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중단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제방의 사찰은 상당한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의해 사찰 환경은 피폐해지고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사찰이 처한 현실입니다. 또한 종교인구의 감소, 고령화, 출가자의 감소 등 한국불교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출가수행자들은 내성불구(內省不疚)의 마음가짐으로 수행정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중단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며, 중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59 (2015)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